

Online Series

2015.01.01. | CO 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북한은 2015년도 김정일의 신년사를 9시 30분경부터 방영했다. 2012, 2013, 2014년도에 비해 30분 늦은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자그마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신년사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구심을 반영했다. ‘정치적 사상 강국의 강화’와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2014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남관계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세히 언급했다. 신년사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큰 변화 없이 고압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2015년도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특징 1: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 위력’의 3대 정책 방향

- 대내외 정세에 대한 위구심을 반영

과거 신년사는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 핵심 슬로건을 내세운 뒤에 경제정책을

제시하곤 했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경제정책 제시에 앞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의 3가지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서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사상 강국’의 강화,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기’이다. 이 같은 3가지 항목은 과거 년도에는 경제정책 이후에 서술되곤 하던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3가지 항목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위구심의 핵심은 2014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이 결의안은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도 가결되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상 강국’ 건설

우선 내부적인 문제를 보자.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단속은 약화시켰지만, 북한 내부가 외부와 접촉하는 문제에 대한 단속은 매우 강화했다. 여기에는 전화통화, 외부 영상물, 대북송금에 대한 단속이 포함된다. 그런데 2014년의 유엔 인권 결의안 그리고 소니 픽처스의 영화 The Interview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갈등이 증가했다. 인권 문제와 영화 The Interview는 북한 내부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치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북한정권에게 2015년에 내부 통제와 단속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실제로 신년사는 ‘정치사상 강국’을 2015년도 3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 구체적 내용에서 미루어 보면, 북한 당국은 2015년도에 당 조직을 앞세워 내부적으로 사상통제와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각종 단속을 현저히 강화할 것이다. 이는 2015년도 정권과 사회 간의 긴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다음으로 외부적 문제를 보자. 북한은 11월과 12월의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을 강력히 배격했다. 이에 대응하여 11월 20일 외무성 성명은 ‘새로운 핵실험’과 ‘전쟁억제력의 무제한강화’를 선언했으며, 11월 23일 국방위 성명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을 공언했다. 이 두 가지 공식 성명을 보면, 북한이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2015년도 3대 정책 중점의 하나로 설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5년 신년사는 또한 ‘비열한 인권소동’ 때문에, ‘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할 것도 공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위력’

3대 정책 중점의 마지막 항목인 ‘과학기술의 위력’을 보자. 신년사는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강조하는 것은 2015년도에도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첨단돌파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국방력 강화’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징 2: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남 대화 공세

2015년도 신년사는 대남 및 대외 부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우리 언론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이 성사되기 위한 전제조건도 이례적으로 장황하게 서술했다. 그 전제조건들의 내용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4년에 이미 몇 번에 걸쳐 제시했던 것들이다. 이를 보면,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 ‘자기의 사상과 체도의 절대시를 통한 체제 대결’ 중단, ‘제도통일 추구’ 중단, ‘7·4 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통일현장, 통일대강’으로 준수할 것 등이다. 그러나 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중추로 국방력 강화’와 ‘선군정치 및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신년사 전체 문맥을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한국이 충족한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에 대해 장황히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탐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2015년 신년사에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의 활성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고위급 접촉 재개’, ‘최고위급 회담도 가능’과 같은 단어를 이례적으로 다양하게 구사한데서

그 의도가 드러난다. 둘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공동행사 개최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 압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29일 금년 1월중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데 대한 북한식 우회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특징 3: 온건한, 그렇지만 고압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경제정책 제시에서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신년사는 2015년도 경제정책의 총괄 특징으로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한다”고 쓰고 있다. 이는 2015년도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9~2012년간 새로운 투자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강성 대국’ 건설을 추진하던 때에는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대진군’과 같은 격한 동원성 구호가 경제정책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요구되는 대대적 투자와 건설 그리고 고도의 주민 동원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와 기업에 노동력, 물자, 자금을 강제 기부 강요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그러한 2015년에는 격한 동원성 구호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정상화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식의 정책이 내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2015년에도 물가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시된 경제분야 과업의 내용을 보면,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며, 따라서 경제정책 노선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 말기부터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매우 강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곤 했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재건과 국방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2015년도 예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식생활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도입한 ‘포전담당제’가 2013년과 2014년도 농산물 생산증대에 이바지했다고 공표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2014년에도 그리고 금년도 신년사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년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공업 진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의 정상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 그리고 금속·화학과 같은 기간공업, 또한 철도운수 관련 해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고답적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만 강조할 뿐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기술, 우리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으로서는 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 및 빨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산림복구’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주민 생활에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6·28 방침’, (국유기업의) ‘독자경영’ 등의 개념으로도 알려져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위한 정책은 지속될 것이 천명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4년도 신년사에서부터 등장했었다. 2015년에는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2015년에도 여전히 국방공업부문을 우선시하는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김정은 권력 세습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거행했고, 대남 군사 긴장 조성 행위를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 군비뿐 아니라 재래식 군비도 대대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5년도 신년사도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내부의 각종 자원 분배에서 여전히 국방부문이 최우선시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징 4: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는 ‘10월의 대축전장’

신년사를 보면,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대대적으로 기념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앞서 이번 신년사에서의 경제정책이 비교적 온건하고 무리 없이 설정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기 위해 중도에 경제정책을 갑자기 급진적 동원정책으로 바꿀 가능성도 존재한다. 70돌을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 토목 건설 사업 또는 선물 준비 자금 마련 사업이 갑자기 예정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경제에 많은 무리가 갈 것이며, 2013년도부터 유지되고 있는 쌀값과 환율의

안정이 파괴되고 다시 한 번 고도 인플레이션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결어

2015년도 북한은 근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정책적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2015년도 신년사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 보유 고수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갈등의 강화, 2014년도 유엔인권결의안으로 인한 국제적 국내적 입지 손상에 상당한 위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015년도 신년사는 북한 당국이 대내외 고립과 긴장이 강화되는 것에 정책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대남정책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과 김정은의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지원 획득을 위해 절실하다. 특히 ‘최고위급 회담’의 성사는 북한 국내적으로 또한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입지를 단번에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전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북한은 다방면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내가 결합하면,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한국에 대해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과 ‘핵 재난’을 협박하고 또한 한국이 북한의 전제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라고 강압하는 것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